



세계 노사정 소식

미국

미국 : 청년층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증가

최근 한 청년지원단체인 영 인빈서블(Young Invincibles)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청년 실업률이 계속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실업으로 인해 덜 걷히는 소득세와 반대로 늘어나는 복지 재정을 포함해 연간 총 2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실업률은 7.3%인 데 비해, 16~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5%에 달하고 있다. 이 수치는 경제활동인구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일을 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설사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를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실업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현재의 높은 청년실업률의 경제적 손실, 일자리가 없는 청년층이 만약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납부했을 세금, 그리고 정부에서 지출하지 않았을 실업급여나 기타 사회복지 재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 결과, 일자리 부족과 실업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은

18~24세 청년 1인당 4,100달러, 25~34세 청년 1인당 9,875달러로 추산되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실업률이 2007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납세자는 1인당 세금 53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는 현재보다 78억 달러 정도의 지출을 아끼거나 세수를 확충할 수 있고,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약 11억 달러를 확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업통계에서 빠져 있는 실망실업자들을 포함시킬 경우 경제적 손실은 총 250억 달러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손실액 가운데 93%는 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납부했을 소득세이고, 나머지 7%는 실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다.

이 보고서는 경제위기가 청년층과 그들의 평생 소득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가장 최근의 연구이다. 이 연구결과는 도제교육이나 직업학교와 같이 이미 사라진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바마 대통



령은 졸업생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한 대학들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연구보고서의 머리말을 쓴 조지타운 대학의 교육·노동력센터장 앤소니 카네베일은 청년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1980년대 베이비붐 세대에 들어 불필요해짐에 따라 사라졌는데,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청년층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도 백인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세대와 같은 중산층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청년 실업과 청년 직업교육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어 퇴직연금 등 노인층에 대한 세금지출이 사실상 청년층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연방 청소년직업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2002년부터 연간 10억 달러가 축소되었다고 지적

하면서, 노동부에 등록된 도제교육 프로그램과 지난 2013년 8만 개 일자리에 5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원한 전국적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아메리코(AmeriCorps: 건강과 교육, 환경, 공공안전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미국 연방 차원의 자원봉사단체)를 더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2005년 폐지된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기회 보조금 제도(Youth Opportunity Grants)를 부활시킬 것을 제안했다.

- 출처: 1. 뉴욕타임즈지, 2014년 1월 7일자, 'In Jobless Youth, U.S. Is Said to Pay High Price'
- 2. 영 인빈서블(Young Invincibles) 보고서, 2014년 1월, 'IN THIS TOGETHER: The Hidden Cost of Young Adult Unemployment'

미국 : 국회예산처, 오바마케어가 250만여 풀타임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미 국회예산처는 지난 2014년 2월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바마케어(정식 명칭은 Affordable Care Act)의 시행으로 250만여 개의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화당에는 이 법안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근거를 주고 민주당을 수세로 만드는 새로운 정치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비정당 조직인 국회예산처의 이번 연구보고서는

예산효과에 대한 정기적 업데이트 작업의 일부로 진행되었는데, 사실상 공화당이 공세의 근거로 삼는 표면적 내용 이상의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 연구결과가 “절망적”이며, “끔찍하다”고 논평하면서, 오바마의 개혁 의료보험이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보고서는 공화당 지도부가 지적한 대로 오바마케어가 근로시간과 풀타임 고용을 감소시킬 것

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그 원인이 오바마케어의 고용주 의무조항(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역자주)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일자리나 근로시간을 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받기 위해서 풀타임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오바마케어로 의료보험이 확대되면서 다른 통로로 저렴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일을 그만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향후 10년간 감소하게 될 총 누적 근로시간을 일자리로 환산하면 250만 개 풀타임 일자리의 감소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인 해리 레이드 네바다주 상원의원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전직하지 못하는 '직장 얽매임(job lock)'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고서가 잘 보여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행위자가 되어야 하며,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화당은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만큼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공화당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인 로이 블런

트 미주리주 상원의원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커리어 선택이 일자리 감소 원인의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오바마케어의 효과에 대한 이전의 예측에 비해 이번 보고서 결과는 2배가량 많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오바마케어에 의한 일자리 감소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공화당의 존 뵈너 하원의장은 "수년 동안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이 소규모 사업체에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국회예산처 보고서는 오바마케어가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공격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제이 카니 백악관 공보수석은 보고서도 오바마케어에 의해 파트타임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바마케어가 일자리를 해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현재 오바마케어에서 고용주 의무조항을 위반하는 사업체에 부과하기로 했던 벌금은 2015년까지 유예된 상태이다.

- 출처: 뉴욕타임즈지, 2014년 2월 5일자, 'Health Care Law Projected to Cut the Labor Force'



유럽

EU :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유럽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부채위기에 놓인 국가들의 높은 실업률은 전체 유럽연합의 경제적인 성장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몇몇 국가의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경기 흐름의 변곡점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시장 활성화를 통해 불황의 고리를 끊어 내고자 하는 노력이 유럽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유럽의회는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시작한 가운데 유럽 내의 노동력 교류를 위한 고용지원서비스의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 EU 회원국 내 유럽인 고용지원 사이트인 "EURES"는 유럽 내의 국가 간 노동력 교류와 취업 지원을 위해 구인정보와 국외에서 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해당 국가의 취업조건 및 취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사용자 역시 양질의 국외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EU 국가 내의 구직자 정보가 제공된다.

아직은 EU 회원국의 전체 구인정보 중 3분의 1만

이 EURES 사이트에 등록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등록 구인정보가 더욱 증가할 수 있도록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지원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EU 노동위원회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노동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구인-구직 활동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EU 회원국 내에서 교류가 이루어진 노동력 규모는 약 750만 명으로 이는 전체 노동시장의 3% 수준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도가 일부 국가로의 노동력 집중으로 이어지지 않고, 높은 실업률과 불황을 겪고 있는 국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타게스샤우(Tagesschau), 2013년 1월 17일자, 'EU will Jobsuche erleichtern'

독일 : 법정 최저임금제 논쟁 지속

지난 2013년 9월 독일의 연방하원 선거 후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의 거대연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독일 국민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었던 이슈는 사민당의 핵심 정책이었던 최저임금제에 관한 사항이었다. 결국 2015년부터 시급 8.50유로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연정협약은 우선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새 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는 일단락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시행을 1년 앞두고 정치권을 비롯한 재계 및 노동계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논쟁의 불씨는 지난 2013년 12월 22일 기사당 총수 호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가 퇴직 연금자와 실습생 또는 단기 계절노동자 등 일부 특정 그룹을 법정 최저임금제의 예외로 두자고 요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기사당의 주장은 독일 사용자연합 대표인 잉고 크라머(Ingo Kramer)가 언론을 통해 8.50유로의 최저임금제가 일괄적으로 도입될 경우 아직 단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졸업장이 없는 청년층, 그리고 장기 실업자 및 저학력자들이 더욱 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또한 크라머는 최저임금제가 무엇보다 구 동독지역의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의 일괄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4명 중 1명의 수입이 앞으로 시행될 8.50유

로의 시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계 및 보수정당의 주장에 대해 사민당 소속의 신임 연방노동부 장관인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는 강하게 거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독일 노동조합연맹 대표인 미카엘 쪼머(Michael Sommer) 역시 기사당 총수 호스트 제호퍼의 주장에 대해 특정 고용주나 근로자에 대해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월 450유로를 기준으로 한 미니잡 일자리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가 대화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대안에 대해 아직은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법적 규정이 완비되어야 하는 시점까지는 법정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1. 매니저매거진(manager-magazin)지, 2013년 12월 23일자, 'Seehofer fordert Ausnahmen vom Mindestlohn'
- 2. 매니저매거진(manager-magazin)지, 2013년 1월 5일자, 'Jeder vierte Selbstständige verdient unter 8,50 Euro'



독일 : 대학 졸업자의 저임금근로 비율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은 대학 진학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실제로 2007년까지는 40% 미만의 대학 진학률을 나타내며 이러한 평가가 유효하였다. 독일 경제가 높은 실업률과 극심한 경기침체로 몸살을 앓던 2000년대 초반에 다소 증가했던 대학 진학률이 노동시장의 불황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자 다시금 하락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이 자리 잡은 2006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지난 2011년부터는 50%를 넘어섰고, 2013년에는 57%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에서 대학 졸업장을 취득했다고 해도 반드시 높은 급여수준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일숙련직업훈련연구소(IAQ)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명 중 1명의 대학 졸업자가 시간당 9.30유로(세전)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68만 8,000명으로 전체 대학 졸업자의 8.6%에 해당한다. 이번 연구에서 기준이 된 시급 9.30유로(세 전)는 전체 근로자 평균시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지난 2012년의 경우 이 금액이 9.30유로에 해당한다.

IAQ의 전문가인 클라우디아 바인코프(Claudia Weinkopf)는 “수년 전부터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대학 졸업자는 꾸준히 있어 왔으며, 그 수치는 약 7~12% 사이에서 변동을 보이고 있다”고 대학 졸업자의 저임금근로 비율에 대해 설명하였다.

IAQ의 이번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특히 여성 대학 졸업자의 임금수준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30유로 미만의 저임금을 받는 전체 근로자 중 대학을 졸업한 남성은 약 6.1%인 반면, 여성은 11.4%로 남성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저임금근로, 특히 미니잡 시장의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어 여성의 임금수준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은 고학력자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밖에 연방노동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대학을 졸업한 실업자는 2012년과 비교해 2만 1,400명 증가한 19만 1,100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이 13%나 증가한 주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대학 졸업자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여전히 대학 졸업자들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하면서, “2013년 대학 졸업자 실업률은 3%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대학 진학률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고학력 실업자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1. 슈피겔(Spiegel)지, 2014년 1월 19일자, ‘Neue Studie: Hunderttausende Akademiker arbeiten zu Niedriglöhnen’
- 2. 연방통계청(destatis), ‘Entwicklung der Studienanfängerquote in Deutschland von 2000 bis 2013’

독일 : 독일 노동전문가, 무허가(불법)노동 증가 위험 경고

지난 1년 사이 독일의 무허가(불법)노동 인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에도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린츠 대학 및 튀빙거 응용 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 독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3,385억 유로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총생산의 12.2%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13년보다는 약 0.2% 감소한 수치에 해당한다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지하경제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더 이상은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지하경제의 축소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는 이와 같이 지하경제가 축소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정부의 정책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난 10년 동안 합법적 일자리에서의 급여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에 들어서면서 합법적 일자리의 임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경제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아직 경제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많은 근로자들의 합법적 일자리에의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무허가(불법)노동 인구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은 노동비용의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법정 최저임금제 시행, 연금수급개시연령 하향 조정, 요양보험료 인상은 합법적 일자리에서의 노동비용

을 증가시킬 것이고, 그 부작용으로 무허가(불법)노동이 증가하여 지하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당 연구의 전문가들은 매년 약 30억 유로 정도의 지하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세금 역시 증가하는 정책이 지속되는 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비용의 증가로 급여 총액이 인상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임금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로 실수령급여가 감소하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정책은 합법적 일자리에 대한 매력을 더욱 반감시켜 지하경제가 약 53억 유로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무허가(불법)노동의 증가는 단지 지하경제의 확대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며, 독일 사회에서 범죄자를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차기 정부의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통해 기업에 유리한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무허가(불법)노동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민당이 정부 내에서 추진할 노동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지만, 시민당 측에서도 그 결과를 무시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



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슈피겔 (Spiegel)지, 2014년 2월 4일자,

‘Trendumkehr: Experten warnen vor Anstieg der Schwarzarbeit ‘

독일 : 부업 미니잡 인구, 10년간 약 두 배 증가

독일 노동시장에는 현재 약 600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3년 하르트스개혁을 통해 미니잡제도를 개혁하면서 기업의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근로시간은 단축하는 대신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부업 미니잡에 사회보장 세 면제 혜택을 주도록 하였다.

해당 미니잡정책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2013년 6월 기준으로 본업 이외에 추가로 수입을 얻기 위해 부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에는 23명의 근로자 중 1명이 부업에 종사하였으나, 2013년 6월에는 11명 중 1명의 근로자가 미니잡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부업 종사자 수는 전체 미니잡 인구 약 600만 명 중 약 262만 명으로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노동시장 전문가이자 녹색당 소속 정치인인 브리기테 포트머는 “하나의 직업으로 얻는 소득으로는 충분히 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부업으로 미니잡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혜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독일 의회는 8.50유로로 예정된 법정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니잡 일자리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장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도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처: 타게스샤우(Tagesschau), 2014년 2월 5일자, ‘Zahl der Deutschen mit Zweitjob steigt’

독일 : 노동조합, 공무원임금 인상 요구

독일 노동조합이 2014년 임금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연방 및 지방 공무원에 대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인상폭은 약 3.5%로 약 100유로에 해당한다. 독일의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독일 서

비스노조(Ver.di)와 베를린의 공무원노조(dbb)로, 이번 임금협약 시즌에 돌입하기에 앞서 공동으로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임금협약은 2014년 3월 13일부터 포츠담에서 시작될 예정

이다.

이러한 노조 진영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토마스 드 마이치어(Thomas de Maiziere) 연방내무부 장관은 “노조가 주장하는 인상액을 연방과 지방정부에 모두 적용할 경우 그 금액은 수십억 유로에 달한다”며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임금협약에서 임금인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종은 행정직원, 육아보조시설 종사자, 시내교통관련 부서 또는 폐기물(쓰레기) 수거 및 도로관리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내교통 종사자의 경우에는 공통적 인상분 외에 70유로의 추가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 낮은 임금인상률로 인해 지원율이 낮았던 분야에 대한 유인책으로서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여기에 직업교육생에 대한 급여도 약 100유로 인상을 요구할 것이

라고 밝혔다.

여기에 30일의 휴가권한 보장 및 직업교육생의 채용 강화도 요구하고 나섰다. 임금인상을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 요구는 실질임금의 인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약 노조 측의 요구대로 인상될 경우 공무원에 대한 임금규모는 지방정부 57억 9천만 유로, 연방정부 16억 6천만 유로로 총 74억 5천만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에 앞서 나온 인상 요구여서 실제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플러스 성장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노조 측이 임금인상 요구를 쉽게 양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출처: 타게스샤우(Tagesschau), 2014년 2월 11일자, ‘Gewerkschaften fordern mehr Lohn’

독일 : 연방경제부 장관, 독일 고용시장 활성화 기대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으로 새롭게 구성된 앙겔라 메르켈 수상의 제3기 정부에서 부수상과 함께 연방경제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사민당 대표 지그마르 가브리엘(Sigmar Gabriel)이 독일 고용시장이 새로운 기록을 계속하여 갱신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가브리엘 대표는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 진영의 수장으로서 앞으로의 노동 및 경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브리엘 대표는 2014년 첫 번째 연간 경제전망을 통해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 사이의 정책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사민당의 주요 정책인 최저임금 및 시간제 일자리와 도급계약에 대한 규제 강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브리엘 대표는 2014년 고용시장 전망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독일의 경제활동인구가 2014년에도 새로운 기록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독일은 2013년 12월 기준으로 약 419만 명의 경제활동인구를 기록하며 1년간 약 26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브리엘 대표는 2014년에도 경제활동인구는 약 24만 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와 같은 안정적인 추세는 2015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의 실업률은 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이를 ‘불안한 안정세’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경제의 플러스 성장에 힘입어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014년의 예상 경제성장률 역시 1.8%로 호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플러스 성장이 2015년에도 이어져 약 1~2%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2013년의 경제성장률이 0.4%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2015년까지 예측된 독일의 경제성

장률은 실업률을 감소시킬 정도의 경제성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정 최저임금제의 시행을 바탕으로 한 임금수준의 인상, 파견근로 및 시간제근로와 관련된 규제 강화 등이 향후 독일의 노동시장과 경제에 어떠한 여파를 가져오는지에 따라 이러한 경제전망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1. 슈피겔(Spiegel)지, 2014년 2월 12일자, ‘Jahreswirtschaftsbericht: Gabriel erwartet neuen Rekord bei Beschäftigung’
- 2.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지, 2014년 2월 11일자, ‘Gabriel erwartet neuen Beschäftigungsrekord’

스웨덴 : 실업률 감소 추세

스웨덴 국영고용센터가 최근 발표한 노동시장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의 총노동인구 대비 고용센터 등록 실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영고용센터에 등록 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수는 총 41만 1,000명인데, 이는 전체 등록 노동인구의 약 8.7%에 해당한다.

국영고용센터에 등록해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는 실업자는 약간 감소하였는데, 이 같은 추세는 앞으

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영고용센터의 노동시장 분석책임자 마츠 바드만(Mats Wadman)에 의하면, 국영고용센터가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구인 수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원감축 예정 통보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64세 연령의 노동인구 중 약 41만 1,000명이 201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영고용센터에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전년도인 2012년

말과 비교하여 약 3,000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실업률은 8.7%로 2012년 말보다 약 0.2%포인트 낮다. 한편 18~24세 연령의 청년 실업률은 등록 노동인구의 17.2%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약 1.2%포인트 낮아진 수치이다.

2013년 12월만 보면 5만 명의 구인광고가 추가로 국영고용센터에 등록되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지난 수개월 동안 그다지 변화가 없다. 또한 약 3만 명이 구직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2012년과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원

감축 예정으로 통보된 수치는 약 3,300명으로 전년도인 2012년 12월과 비교할 때, 약 2,400명이 감소한 수준이다. 물론 2012년 12월은 다른 기간과 비교할 때 특별히 인원감축 예정 통보 규모가 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볼 때 인원감축 예정 통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출처: 스웨덴 국영고용센터, 2014년 1월 14일자, 'Arbetslösheten minskar'

스웨덴 : 여름철 계절일자리 구인 개시

스웨덴 국영고용센터가 올해 여름에 일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서둘러 구직을 개시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는 여름철 한시적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구인광고가 예전에 비해 더욱 많이 국영고용센터로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1월 중순 현재 9,283개의 여름철 구인광고가 접수되었다. 보통 여름철 계절일자리는 학생들이 많이 찾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실 이 일자리는 모든 연령대의 구직자에게 개방되어 있다.

학생이든지 일반 구직자이든지 불문하고 여름철 계절일자리는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고 짧은 기간이지만 노동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계절일자리 구직자들은 국영고용센터가 발행하는 구인광고를 잘 읽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직자가

직접 고용주를 접촉해 여름철 계절일자리를 찾는 것도 필요한데, 이는 모든 고용주들이 국영고용센터에 구인광고를 내보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여름철 계절일자리 고용을 위해 고용주들은 이미 그 전해 12월에 구인광고를 신청하고 있는데, 과거의 예를 볼 때 구인광고의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국영고용센터는 이렇게 고용주들이 점점 더 빨리 구인광고를 내는 이유는 몇 개의 직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국영고용센터는 2014년 여름철 계절일자리가 2013년에 비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3년 12월 여름철 계절일자리 구인광고의 수치는 4,921건에 달하였다. 2012년 12월의 수치인 3,091건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여름철 계절일자리의 경우 보건복지분야의 고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13년의 경우 3,309명인 반면, 2012년의 경우 2,218명이었다.

보건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 소매업 등에서도 여름철 구인광고를 많이 내고 있다. 최근 2년 동안을 볼 때 이런 분야의 구인광고는 보통 1~2월 사이에 많이 볼 수 있다. 2013년의 경우 이 분야의 전체 여름철 계절일자리는 6만 4,320건이었는데, 약 3만 545건이 1~2월에 발표되었다. 2012년의 경우에는 전체 6만 553건에서 2만 8,529건이 같

은 시기에 발표되었다.

2013년에 여름철 고용 인원이 많았던 분야는 보건복지 분야 3만 2,457명, 금융, 기업 서비스 8,158명, 호텔 및 레스토랑 4,464명, 소매업은 3,768명이었다. 2012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 분야 2만 8,038명, 금융, 기업 서비스 6,864명, 호텔 및 레스토랑 4,397명, 소매업은 2,248명이었다.

- 출처: 스웨덴 국영고용센터, 2014년 1월 16일자, 'Sommarjobben är här - dags att söka!'

영국 : 카메론 총리, 국민연금 매년 오를 것이라 공약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2020년까지 국민연금(state pension)을 매년 인상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다음 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할 경우 국민연금만큼은 반드시 예산 한도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말했다. 카메론 총리의 이 같은 약속은 겨울 난방비 지원, TV 라이선스, 버스 무료승차권 및 약 처방과 같은 다른 혜택들을 줄이더라도 연금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점을 고령 유권자들에게 재확인시킨 것이다.

카메론 총리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려운 결정들을 할 것이고 장기적인 경제계획의 일환으로 지출을 억제할 것이므로 연금은 매년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열심히 일해 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

초연금(basic state pension)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적용 제외가 가능한 추가연금(additional state pension)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연금은 새로운 계획안에 따라 2014년 4월부터 기초연금(basic state pension) 부분이 2011~2012년의 평균 근로소득에 따른 인상에 추가로 약 연 440파운드 더 인상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카메론 총리는 연금에 대한 약속이 “다음 총선 공약의 첫 번째 주요 항목”이라고 선데이 타임즈에 밝히면서, “시민사회에서 적절한 국민연금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금수급연령(pension age)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어렵고 장기적인 결정을 내리면 제대로 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조지 오스번 재무장관은 추계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의 30~40대는 68세 혹은 69세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 발표는 “젊은 사람들이 쓰러질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반

발을 샀다.

- 출처: 가디언지, 2014년 1월 5일자, ‘State pension will increase every year, pledges David Cameron’

영국 : 연립정부, ‘실질임금 상승’ 발표

영국 정부는 노동자 대부분의 2013년 실질임금이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감세를 고려했을 때 최상위 10%를 제외한 전 계층에서 적어도 2.5%의 실질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4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2.4%보다 높은 수준이다. 노동당의 에드 밀리반드 대표는 정부의 발표 결과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말하며 내각이 국민의 생활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냐고 논평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상위 10%의 실질임금은 평균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용자 이자상환과 같은 주택 구입 및 소유 비용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세 및 국민보험 삭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보수당의 기술기업부 장관인 매튜 헨콕(Matthew Hancock)은 “대침체로 인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결과적으로 가정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경제계획의 일환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수령해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2014년 1월 23일에 있었던 한 연설에서 실질임금에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지만 국민가계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유민주당은 2015년부터 어느 누구도 첫 10,000파운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될, 최저소득층에 대한 감세 추진의 장본인이 자신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당은 실질임금이 상승했다는 근거로 정부가 내놓은 수치들이 연근로소득이 아니라 주 단위이며 수당 삭감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밀리반드 대표는 “이것은 월급봉투가 날로 얇아지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생계비 위기에 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궁지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들이 내놓은 것은 일련의 의심스러운 통계치와 앞뒤가 맞지 않는 데이터 들뿐”이라고 논평했다.

세입연구원(Institute of Fiscal Studies)의 폴 존슨 원장은 BBC 라디오 4의 ‘투데이’ 프로그램에서



2012~2013년 실질임금 계산을 위해 정부가 “완벽하게 합리적인 숫자들”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좀 더 최근에 나온 통계청 데이터인 주간 평균 근로소득 인덱스(the average weekly earnings index)는 임금상승이 “최근 몇 달 동안의 물가상승보다 훨씬 더 느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세입연구원이 자체 분석한 바로는 “경기회복이 예상대로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2015년에는 가계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6~7년 전, 즉 경기불황 이전의 가계소득 수준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존슨 원장은 덧붙였다. 더불어 세입연구원은 2010년 이래 연실질임금이 평균 1,600파운드 줄었다는 노

동당의 주장은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노총 TUC의 프란시스 오그레디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수치들은 세금공제 및 수당의 효과, 특히 육아수당의 동결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초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영국 경제전망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다른 주요 유럽 경제보다 빠른 2.4% 성장을 예상하였다.

- 출처: BBC 뉴스, 2014년 1월 24일자, ‘UK pay rising in real terms, says coalition’

프랑스 :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직접선거 2015년부터 폐지

미셸 사팡 노동부 장관은 매년 1억 유로가량이 소요되는 노동쟁의조정위원회(Conseil de prud'hommes) 구성을 위한 직접선거를 2015년부터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 14,500명에 달하는 노동쟁의조정위원(노동재판관) 지정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이들을 임명할 권한을 갖는 것이다. 노동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8개 노사 대표단체에게 전달함에 따라, 그 이후 위원회 구성은 더 이상 선거가 아닌 각각의 노사 대표단체들의 전국적 지지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측의 지지율은 이미 정해져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의 기업 내부에서 기업운영위원회 구성원과 직원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통해 각 노동조합의 지지율이 산출되었고, 여기에 5인 미만의 소기업과 농업회의소(Chambre d'agriculture)를 위해 2012년 말 시행된 특별선거의 결과가 추가되었다. 이 결과 CGT가 가장 높은 26.81%의 지지율을 얻어 위원회 구성원 중 노동조합에 배정된 의석의 26.81%를 차지하게 되며, 그 뒤를 이어 CFDT가 26%, FO가 16%의 의석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직접선거의 폐지는 지난 2008년 노동조합 대표성 문제가 대두된 이후 새로운 지지도 측정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어진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CGT의 티에리 르퐁(Thierry Lapaon) 위원장은 “선거 폐지는 근로자들의 투표권을 박탈

하는 행위”라고 규탄한 반면, FO의 디디에 포트(Didier Porte) 위원장은 “새로운 제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FDT의 경우는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CGT는 직접선거 폐지에 대해 반발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일부 좌파 진영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2014년 1월 16일, 미셸 사팡 노동부 장관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수의 상원의원(좌파전선, 대중운동연합, 생태유럽-녹색당)들은 1979년에 도입된 직접선거 폐지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개혁의 주된 근거는 선거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용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원칙상 5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선거의 투표율은 갈수록 낮아져 2008년에는 25% 정도였으며, 이는 1979년 62%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투표 절차는 매우 복잡한 편이다. 위원회 구성은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으로 나뉘어져 있고, 5개 분과(농업, 상업, 간부, 제조업, 기타)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노동부 장관의 입장은 이러한 복잡함을 고려하여, 행정명령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출처: 1. 르피가로(Le Figaro)지, 2013년 11월 19일자, ‘Les élections prud’ homales de 2015 sont supprimées’
- 2. 르몽드(Le Monde)지, 2014년 1월 20일자, ‘La réforme des prud’ hommes reportée’

프랑스 : 실업보험 개혁 노사협상, 시작부터 난항

실업보험 개혁을 둘러싼 노사협상이 2014년 2월 13일 시작됐다. 노동조합 FO의 협상단 대표 스테판 라디는 “구체화된 것은 전혀 없으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하며, “균형 재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견해 차가 심하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실업보험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실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Unedic(전국상공업고용연합)의 재정 적자는 2013년에 40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2014년에는 43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13일 오전, 사용자단체 메데프(Medef)

의 제안 문건이 노동조합의 반발을 샀다. 이 제안은 공연·방송 부문 종사자의 특별 실업보험체제를 폐지하고,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공공부문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격분한 CGT 대표단은 TV 방송 카메라 앞에서 메데프의 문서를 갈기갈기 찢기까지 했다. CGT 협상단 대표 에릭 오뱅은 문서를 찢기 전, “CGT는 전 근로자, 불안정 노동자, 구직자, 간접고용 종사자, 그리고 공연·방송 부문 종사자들에게 실력행사를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FDT는 이번 협상의 유일한 목표는 축적 가능



한 실업 보험 기간에 있음을 강조하며, 사용자단체의 제안 문서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조치는 직업활동 이후 실업상태에 빠진 실업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실업보상 혜택 기간 만료 이전에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축적되어, 다시 실업상태가 될 경우 이 혜택의 기간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CFTD 협상단 대표 베로니크 데스까크는 공연·방송 부문 종사자들의 특별 체제는 “현재 협상의 안건이 아니다”라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오렐리 필리페티 문화부 장관 역시 메데프의 제안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녀는 2014년 2월 15일, 르파리지앵(Le Parisien)과의 인터뷰에서 “사용자단체가 문화를 죽이려 하고 있다”며 비판하며, “공연·방송 부문 종사자들은 특권 계층이 아닐 뿐 아니라 이들의 경제활동은 국내총생산의 3.2%를 차지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 협상단의 장 프랑수아 필리아는 과도한 적자와 부채로 인해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17년부터는 실업보험의 존재 자체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중소기업연맹(CGPM) 대표 즈느비에브 로와는 “우리가 보기에 이는 실업보험체제 간 형평성에 관한 문제이며, 이 문건은 균형 잡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5개 노조와 사용자단체는 3월 13일까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 출처: 1. 르몽드(Le Monde)지, 2014년 2월 13일자, ‘Assurance-chômage : les négociations entre partenaires sociaux commencent mal’
- 2. 르파리지앵(Le Parisien)지, 2014년 2월 15일자, ‘Aurélie Filippetti : Le Medef veut tuer la culture’

프랑스 : 2013년 0.3% 경제성장률 기록, 제조업 고용 하락 여전

2014년 2월 14일 통계청(INSEE)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0.3%를 포함, 2013년 한 해 성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0.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3년 초에 예상한 0.1% 성장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통계청 세드릭 오드니 정세 담당 수석연구원은 “3분기에 다소 주춤한 이후, 좋은 소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프랑스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을 나

타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에르 모스코비치(Pierre Moscovici)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발표가 눈부신 성과는 아니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징후라는 건 확실하다”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결과로 인해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낙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이 +0.4%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유로존 전체의 경우 -0.4% 성장을 기록한 점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 지속되는 고용 하락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업 분야를 제외한 민간부문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고용이 증가했다. 2013년 3분기에는 1만 5,600명이 감소한 반면, 4분기에는 1만 4,700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증가는 같은 기간 2만 3,000명이 증가한 간접고용 부문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제조업, 건설 부문에서는 여전히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입장에서 보다 낙관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 같은 성장의 구성요소들이다. 먼저 가계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3분기 0.1% 성장에 이어, 4분기에는 0.5%를 기록했다. 또한 투자가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2011년 말 이래 처음으로

로 4분기 투자는 3분기(-0.3%)에 비해 0.6% 증가했다. 특히 기업의 투자가 0.9% 증가한 점도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 부문 실적의 지속성이 취약하다. 오드니 연구원은 2013년 4분기 소비가 늘어난 것은 2014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부가가치세, 자동차 보험료 할증 강화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기에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란 어렵다”고 예측했다. 그럼에도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부적인 성장 동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2014년 예산안 역시 0.9% 경제성장에 맞춰졌고, 프랑스의 성장 잠재성은 1% 이상”이라고 하였다.

- 출처: 르몽드(Le Monde)지, 2014년 2월 14일자, ‘Croissance: comment la France a effacé des années de crise’



아시아

일본 : 가족돌봄의 실태와 과제

후생노동성은 2012년 판 ‘일하는 여성의 실정’을 발표하였다. 가족돌봄의 실태와 과제, 그리고 향후 개선 과제 등이 주된 주제로, 이하에서는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세대에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31.2%를 기록하였다. 향후 그 비율은 더욱 증가해 2035년에는 40.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령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현재,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의 돌봄제공자는 배우자 25.7%, 자녀 20.9%, 자녀의 배우자 15.2%, 사업자 13.3%, 별거 가족 등 9.8%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 가족 중 주된 돌봄제공자는 여성이 69.4%로 남성의 30.6%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돌봄제공자가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8%인데, 여성이 63.7%로 남성의 54.2%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민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가족의 병이나 돌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74.5%, 남성 68.7%로 남녀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된 돌봄제공자의 직업 종사 현황을 보면, ‘무업자’가 57.6%로 가장 많으며, ‘일반 상용근로자’ 17.0%, ‘계약직’ 4.1%, ‘일용

직’ 0.2% 등이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돌봄에 관한 제도나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비율은 약 3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돌봄(개호)보험제도가 18.8%, 그 외 서비스/시설 등의 내용은 10%를 밑돌고 있다. 또한 돌봄을 포함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근로자에게 주지하는 방법은 ‘취업규칙’이 83.7%로 가장 많았다. 돌봄휴직제도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65.6%인데, 근로자 중 돌봄휴직을 취득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6.8%로, 도입하고 있지 않은 기업 15%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휴직을 취득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복수회답),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가 3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차휴가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서’ 18.0%, ‘수입이 줄어서’ 17.2%, ‘동료에게 폐를 끼칠 것 같아서’ 15.7%, ‘대신 일해줄 사람이 없어서’ 14.4%, ‘제도취득 대상 외의 고용조건이라서’ 12.7%, ‘직장에 돌봄휴직 취득자가 없어서’ 12.6% 등이었다.

돌봄기간 중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근로시간이 길었기 때문’이 4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바꿀 수 없어서’가 44.9%로 장시간근로나 근

로시간 조정의 어려움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족돌봄과 일의 양립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첫째, 기업의 돌봄에 관한 제도/규정의 도입과 근로자에 대한 주지, 둘째, 돌봄휴직이 가능하도록 업무분담의 재편/공유 추진 등 돌봄휴직을 하기

쉬운 직장 분위기 만들기, 셋째, 돌봄에 관련된 사내 상담체제의 내실화, 마지막으로, 돌봄을 이유로 이직한 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이 제안되었다.

• 출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平成24年版 働く女性の実情’

일본 :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보육사의 47%, ‘임금이 희망조건과 맞지 않아서’ 구직활동 포기

2014년 1월 5일 발표된 후생노동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육사 일자리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임금이 희망조건과 맞지 않아서’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아동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보육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잠재보육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사는 2013년 5월 헬로워크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잠재보육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958명이 응답하였다(응답률 47.1%).

보육과 관련된 일자리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임금이 희망조건과 맞지 않아서’가 4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후생노동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육사의 평균급여(2012

년)는 월 21만 4,200엔으로, 전 업종 평균보다 10만 엔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과 관련된 일자리를 희망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는 ‘다른 업종에 관심이 있어서’(43.1%), ‘책임감이 무겁고 사고에 대한 염려 때문에’(40.0%), ‘본인의 건강 및 체력이 불안해서’(39.1%), ‘휴가가 적고 사용하기 어려워서’(37.0%)의 순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경우 보육사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3.6%에 달하였다. 보육 현장에서의 근무경험이 없는 사람이 30.3%였으며, 경험자 668명 가운데 5년 미만이 50.7%를 차지했다.

후생노동성의 추계에 의하면, 잠재보육사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60만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며, 일본 정부는 2013년 4월부터 2017년 말까지 5년간 약

* 잠재보육사: 후생노동성은 보육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자를 잠재보육사로 정의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잠재보육사의 재취업 알선이나 상담을 위한 전문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있다.



40만 명의 보육관련 일자리를 정비하는 '대기아동 해소 가속화 플랜'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원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보육사 수는 약 7만 4천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육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후생노동성은 평균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사립 탁아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의 헬로워크에서는 보육사의 응모가 일정 기간 없는 탁아

소를 대상으로 구인조건 재검토 등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잠재보육사의 확보를 위해 현장 복귀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강좌나 실습 등을 실시하는 시설에 조성금을 지급하고 있다.

- 출처: 일본경제신문, 2014년 1월 6일자 조간 46페이지, '求職しない「潜在保育士」、「賃金合わず」47%、厚労省調査'

일본 : 대기업 채용실태

일본의 최대 경영자단체인 일본경단련은 회원 기업 중 1,301개사(대기업이 다수)를 대상으로 2013년 4월 입사자 채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회답수 583사, 회수율 44.8%).

조사결과에 따르면, 95.7%의 기업이 2013년 4월 학졸자 신규채용을 실시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채용한 학졸자에 대한 만족 여부를 보면, '만족' 23.3%, '불만' 13.4%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나머지의 61.8%의 기업은 만족도에 '변함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채용 시 특별히 중시한 것(5개까지 선택)으로 기업의 86.6%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꼽았다. 이어 '주체성' 64.9%, '도전정신' 54.8%, '협동심' 51.8%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책임감' 27.6%, '잠재적 가능성' 21.3%, '논리성' 19.9%, '리더십' 17.7%, '직업관/취로의식' 16.1% 등이었다. 그 외 '어학능력'과 '학교성적'은 5.7%로 매우 낮아 채용

시 거의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업은 매년 4월 학졸자 신규채용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이 있는데, 그 외의 형태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지 보면, '연간 수시채용 실시'가 6.2%, '4월 일괄채용 이후 여름이나 가을에 추가채용 실시' 30.7%로 채용시기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나머지 약 50~60%의 기업은 여전히 4월 일괄채용만을 주된 채용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제도 실시 상황을 보면, '이미 인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8.5%로 과반수였고, '향후 실시예정'은 14.2%로 약 70%의 기업이 인턴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나 향후 실시예정이었다. 현재 인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서, '인턴은 채용과 일체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4.1%에 이르러, 일본의 기업은 인턴제도를 채용활동의 일환으로 활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2011년에 비해 인턴 인원을 '증가' 시킨 기업은 28.7%, '감소'는 9.4%, '변함없음' 58.1%로 전체적으로는 변함없지만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인턴을 늘릴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7.3%이었다.

이러한 인턴을 늘려나가는 데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살펴보면, '종업원의 인턴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57.8%, '인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48.6%, '채용활동 시기가 늦어져 여름에 인턴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졌다' 46.5%, '실

시 요건(5일 이상)이 엄격하다' 39.2%, '비용부담에 비해 장점이 적다' 28.1% 등이었다.

앞으로 채용기준과 채용정보에 대한 명시와 관련해서는, '채용기준의 명확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56.4%, '채용정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76.2%였다.

- 출처: 일본경단련, 2014년 1월 9일자, '新卒採用(2013年4月入社対象)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結果'

일본 : 노동 · 고용정책 동향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일본의 노동 · 고용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아직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우선 주요 동향을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노사정 3자로 구성된 노동정책심의회에서 논의하여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몇가지 정책이 있다. 첫째, 육아휴직지원금의 확대로서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지원금으로 휴직 전 임금의 50%를 지원하였는데, 휴직 후 6개월에 한하여 67%로 인상하기로 하고 2014년 10월부터 실시한다.

둘째, 교육훈련지원금을 확대하고 '교육훈련지원금부금'을 시행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교육훈련 코스를 이수하면 훈련비용의 20%(상한액 10만 엔) 지

원하던 것을 40%로 상향조정하고, 훈련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한 후 취직한 경우 훈련비용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단 1년간 피보험자 1인당 지원금은 최대 48만 엔을 상한액으로 한다. '교육훈련지원금부금'을 신설하여 45세 미만의 이직자가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 중에는 이직 전의 임금에 기초하여 산출한 지원금(기본수당의 1/2, 구체적인 금액은 미정)을 지원하며, 2014년 10월부터 실시 예정이다.

셋째, 취업촉진수당(재취업수당)의 확대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가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잔여일수의 50~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조기재취업한 자가 임금이 하락한 경우 하락한 임금의 6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추가로 지원한다. 단 재취업 후 6



개월간 근무해야 하며, 2014년 4월부터 실시 예정이다.

넷째, 해고 등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이유로 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정해진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도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 기간을 60일간 연장한다. 원래 기한은 2014년 3월 말까지였는데, 앞으로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상이 확정된 내용으로, 앞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주요 정책으로는, 첫째, 노동이동지원조성금을 확충하여 실업을 거치지 않고 직장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다. 둘째, 비정규직 5년 고용 후 무기

전환 신청권 제도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소득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완화조치를 취한다. 셋째, 파견법 개정을 통해 현재 파견기준을 업무에서 근로자로 바꾼다. 넷째, 고도외국인 인재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 출처: 1.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14년 1월 16일자, ‘育児休業給付の充実や教育訓練給付の拡充などの方針を了承’
- 2. 내각부 홈페이지, 2014년 1월, ‘産業競争力の強化に関する実行計画(案)’

일본 : 임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간 의견 일치 확인, 임금인상의 폭과 방법은 논란 예상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지난 2014년 1월 27일, 도쿄도 내에서 주요 기업의 노사 관계자가 임금인상 및 고용에 대해 논의하는 ‘노사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임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춘계 노사교섭에서 기본급을 인상하는 베이스업을 기업이 어디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근로자 및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렌고(연합)의 고가 노부아키 회장은 “물가가 상승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너스 등 일시급에 의한 소득 증가는 소비 확대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월례임금(매달 지급되는 임금)의 인상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게이단렌은 2014년 1월 15일에 발표한 노사교섭 지침에서, 6년 만에 기본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시노다 가즈히사 부회장(오우지 홀딩스 회장)은 “경기회복의 따뜻한 바람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질 수 있도록 경제계는 스스로의 책임을 완수할 방침”이라고 결의를 표명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수익을 확대하여 설비 투자나 고용 확대, 임금인상으로 연결해 경제 선순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임금인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단 무엇보다도 렌고가 요구하고 있는 월례임금의 인상이나, 기본급 인상에 관한 언급은 회피하였다.

이번 춘계 노사교섭에서는 각 업계와 주요 기업의 노동조합이 연달아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는 방침을 굳히고 있는데, 경영자 측은 임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기본급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섭에서는 임금인상의 폭과 방법을 둘러싼 논의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춘계 노사교섭은 2014년 2월 5일로 예정된 게이

단렌과 렌고 회장의 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개시되며, 2월 중에 업계별 요구사항을 취합하면 경영자 측은 3월에 일제 회담을 하게 된다.

- 출처: 일본경제신문 조간 5페이지, 2014년 1월 28일자, ‘賃上げ、必要性は一致、労使フォーラム、経営側「責務果たす」(賃金雇用2014)’

중국 : 2013년 기업 연말상여금 조사연구보고

연말상여금이 직장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중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난 2014년 1월 6일 종파푸신 컨설팅회사(众达朴信)는 2013년 말 중국 내 5,031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말상여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근로자 중 약 60%가 1만~5만 위안의 연말상여금을 받았고,

약 30%는 1만 위안 이하의 금액을 받았다. 연말상여금의 금액은 직장인의 소재 지역과 직급, 산업의 종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 지역의 IT통신산업 전문경영인(专门经理)은 1인당 평균 51,432위안의 연말상여금을 받은 반면, 소매업 전문경영인은 평균 14,792위안의 연말상여금을 받았다.

외자기업의 연말상여금은 모든 직급에서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보다 많았고, 민영기업의 연말상여금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자기업의 고위경영자의 1인당 연말상여금은 96,343위안인 데 반해,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경우 각각 85,454위안과 74,645위안에 그쳤다.

직급 간 연말상여금의 격차를 볼 때, 평직원급, 매니저급, 부서 경영자급과 최고관리자급의 연말상여금은 직급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1〉 연말상여금액과 인구 비율

(단위 : %)

연말상여금액(1인당)	인구 비율
5천 위안 이하	7.3
5천~1만 위안	26.6
1만~5만 위안	60.2
5만~10만 위안	3.1
10만 위안 이상	2.3



〈표 2〉 산업별 · 직급별 1인당 연말상여금

(단위 : 위안)

산업별 분류	최고관리자급	경영자급	매니저급	평직원급
금융	153,433	42,323	15,467	8,534
부동산/건설장비	136,573	38,676	12,534	7,242
첨단기술	124,232	32,456	10,423	6,867
의약/화공	104,232	28,779	9,534	4,756
소비품	86,454	26,545	8,892	3,534
소매백화	75,343	20,534	8,232	3,253
기계제조	68,545	18,423	7,865	2,867
여행/호텔	58,343	15,346	7,233	2,245

연말상여금의 수준은 거시경제의 배경하에서 각 산업별 발전 추세와 성쇠를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금융업은 2012년에 이어 최고수준의 연말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부동산업은 국가의 조정/억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첨단기술산업보다 앞 순위를 차지했다. 금융업의 최고관리자는 연말상여금에서 1인당 153,433위안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업의 최고관리자가 136,573위안으로 그 다음이었다.

지역별로는 화동지역(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푸젠, 장시, 산둥)의 연말상여금이 가장 많았고, 화남 지역(광둥, 광시, 하이난), 화북지역(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 네이멍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3개 지역은 각각 중국 3대 도시군(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징진지 지구)을 기반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화중지역과 서남지역은 각각 4순위와 5순위를 차지했다.

기업의 2014년 연말상여금 조정과 관련하여서, 과반수 이상의 기업(56.1%)이 연말상여금을 인상

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6.5%의 기업은 삭감을 예정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말상여금을 인상할 예정인 기업 중에서, 10~20% 인상 예정인 기업이 51.4%를 차지했으며, 0~10% 증가가 그 다음, 20% 이상 증가가 3위를 차지했다.

〈표 3〉 각 기업유형별 연말상여금 조정 계획

(단위 : %)

기업유형	인상	불변	삭감
외자기업	50.4	42.5	7.1
민영기업	57.8	38.6	3.6
국유기업	56.2	41.5	2.3

57.8%의 민영기업이 금년 연말상여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기업복지제도를 보다 충실히 갖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50.4%의 외자기업만이 금년 연말상여금을 인상할 것이라 밝혔다.

연말상여금의 형식은 현금(76.3%)이 주를 이루었

고, 쇼핑카드(상품권, 31.1%)와 현물(24.9%)이 보조적이었으며, 여행(12.0%), 교육훈련(8.4%)이 그 다음이었다. 이는 연말상여금이 '실용적'이기를 바라

는 사람들의 요구를 드러낸다.

- 출처: 众达朴信, 2014년 1월 6일자, '2013年企业年终奖调研报告(上)'

중국 : 2013년, 고소득자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56,389위안

지난 2014년 1월 2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최신통계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2013년 한 해 도시 주민 1인당 총소득은 29,547위안이였다. 그중 도시 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26,955위안으로 전년 대비 명목상 9.7% 증가했으며, 물가를 고려하면 실제 7.0% 증가했다.

도시주민 1인당 총소득 중에서, 임금소득은 전년 대비 명목상 9.2% 증가했고, 경영소득은 9.8%, 재산소득은 14.6%, 이전소득은 10.1% 증가했다. 한 해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은 8,896위안으로 전년

대비 명목상 12.4% 증가했고 물가를 고려하면 실제로 9.3% 증가했다. 그중 임금소득은 전년 대비 명목상 16.8%, 가정경영순소득은 7.4%, 재산소득은 17.7%, 이전소득은 14.2% 증가했다.

한 해 도시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의 증위값은 24,200위안으로 전년 대비 명목상 10.1% 증가했다. 도시주민 소득을 5분위로 나눌 때, 1인당 가처분소득은 저소득그룹 11,434위안, 중하위소득집단 18,483위안, 중등소득집단 24,518위안, 중상소득집단 32,415위안, 고소득집단 56,389위안이였다.

국가통계국장 마지엔탕(马建堂)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이 실제로 9.3% 증가하여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의 실제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의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농민공의 노동소득, 즉 월소득이 2,609위안으로 13.9% 증가하여 증가속도가 비교적 빨랐다. 둘째, 지난 몇 년간 중앙은 농촌에 막대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지난 2013년 각급재정의 농업에 대한 보조금은 약 1,700억 위안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주민의 이전소득 증가율이 14.2%로 예년보다 더욱 높았을 것이다.”

〈표 1〉 2013년 도시-농민 소득 정황

(단위 : 위안)

2013년	도시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	도시-농촌 수입격차
1인당 총소득	26,955	8,896	3.03:1
증위값	24,200	7,907	3.06:1
저소득집단	11,434	2,583	4.43:1
중하소득집단	18,483	5,516	3.35:1
중등소득집단	24,518	7,942	3.09:1
중상소득집단	32,415	11,373	2.85:1
고소득집단	56,389	21,273	2.65:1



〈표 2〉 2003년 이래 전국주민소득 지니계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주민소득 지니계수	0.479	0.473	0.485	0.487	0.484	0.491	0.490	0.481	0.477	0.474	0.473

마지엔탕 국장은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의 실제 증가율이 7%인 것은 1인당 평균 개념인 데 반해, GDP 7.7% 증가는 1인당 평균 개념이 아니며 인구 증가도 포함한다”라고 밝혔다. 작년 중국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약 0.5%에 달했는데, 만약 인구 증가의 요인이 고려된다면 중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은 약

7.2%로, 1인당 GDP 7.2% 증가와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7% 증가는 곧 기본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것이었다.

- 출처: 북경청년보, 2014년 1월 21일자, ‘国家统计局:人均可支配收入56389元已属高收入(图)’